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836
----------	-------

발의연월일 : 2025. 6. 13.

발 의 자 : 김용태 · 이종배 · 임종득
강대식 · 서천호 · 이달희
김재섭 · 김 건 · 박준태
박덕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를 통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및 인구·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산불·폭우 등과 같은 대형 재난 및 사고 발생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복구를 비롯하여 기반시설 확충,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일정 기간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관할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신청을 하였을 경우에는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의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를 다른 시·도와

동일하게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3항 신설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수도권”을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으로,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를 “접경지역에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까지에서”를 “제6항까지에서”로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u>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도지사는</u> 관할 행정구역의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u>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도지사는</u>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및 지원) ① <u>시·도지사는</u> ----- ----- ----- ----- -----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 ----- ----- ----- ----- ----- -----접경지역에 한정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u>
③ ~ ⑤ (생략)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회발전특 구의 지정 신청, 지정, 지정 변 경·해제의 절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p>	<p>항까지와 같음)</p> <p>⑦ -----제6항까지에서 ----- ----- ----- ----- -----.</p>
---	--